제56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4. 6. 14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4. 6. 14. (금) 16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5명)

- 민간 위원장 (주재)

- 민간위원 : 권남훈, 박익수, 신혜은, 안완기, 오균, 오정은, 우태희, 윤명오, 이인호, 이혁우, 조원동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중기부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4-245	중기부	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	보고안건
②	2024-246	산업부	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	보고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(중기부, 2024-245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(운영) 메뉴판식 규제특례*** **+ 규제혁신 3종세트**(他샌드박스와 동일)

* 절차 간소화, 기준 완화, 금지·제한 해제, 적용배제, 권한이양, 기간단축·연장 등 203개 특례 중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 선택 적용

○ **(현황)** '19년 제도 도입 이후 **총 3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** (1~9차), 현재 **33개 특구***를 **운영 중** ('24.6월 기준)

* 종료 특구 6개 : (1차) 충북·대구·전남·경북, (5·8차) 강원

- **(법령정비) 33개 특구** (1 ~ 8차)를 통한 **규제정비 완료 법령은 40개**

○ **(주요 사례)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**(1차, '19.8~'23.8)

- **(사업내용)**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**분리·재사용·재활용 기준 마련**을 위한 **실증 지원**으로, **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**
- **(규제개선)** 사용후 배터리 **분리·재사용·재활용 세부기준 부재 ⇒ 수집-보관-해체-재활용**의 **근거 마련** (「전기용품 안전관리법」등)
- **(사업실적)** 투자 5.7조원, 기업이전 18개사, 고용 134명, 매출 119억원

○ **(향후계획)** 규제자유특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제도기반 정비

- **(운영 활성화) 특구 운영 전략성**을 **확보**하고 **지역혁신 클러스터**로서 **역할 강화하는 개선방안 마련**(~'24년중)
- **(제도정비) 불필요한 절차 축소, 규제특례 실효성 강화** 등 수요자 편의성과 특구 성과제고를 위해 **「지역특구법」 개정** 추진

* 규제자유특구심의委 위임 확대, 신속임시허가, 국제협력, 부가조건 최소화 등

□ **논의사항**

○ 지역·정부의 산업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**특구 지정** 추진

○ 규제-주관부처가 동일한 경우에 비해 규제부처의 정비 유인이 낮으므로, **규제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 마련**이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

2. (보고)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(산업부, 2024-246호)

□ **보고내용 (요약)**

○ (**운영현황**) ’19년부터 총 **27회**의 **심의위원회***를 개최하여, **517건(실증특례 447건, 임시허가 52건, 적극해석 18건)의 규제특례** 부여(’24.5월)

* 위원장 : 산업부장관 / 정부위원 **12인**(기재부·농림부·국토부 등) + 민간위원 **12인**으로 구성

○ (**대표사례**)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(현대·기아차 등, ‘20.6.25)

- (**사업내용**)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**자동차 전자제어장치* 소프트웨어** 업데이트를 **무선통신을 이용**하여 **직접 업데이트 서비스**

* 유무선통신장치, 첨단운전자보조장치, 파워트레인/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등

- (**규제특례**) 등록된 **정비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 또는 점검작업**을 하는 것을 **제한 ⇒ 시간·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가능**하도록 **임시허가**(「자동차관리법」)

- (**실적**) **15건 임시허가 승인** 및 **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개정 예정**

○ (**향후계획**) 산업융합 규제특례 지원단 신설·운영, 법령정비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등

- (**특례지원단**)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혁신과제 발굴, 현장컨설팅을 통한 실증성과 제고 추진

- (**법령정비 등**) 안전성, 효과성 등 실증 이행 데이터 제공을 통해 법령정비를 지원하고 미개시 사업의 사업개시 가능성 등 점검

□ **논의사항**

○ **규제부처를 설득**할 수 있는 **인센티브가 부족**하므로, 규제부처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할 필요

□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접수